

오늘 우리 경제체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임박한 과제를 내세우기 위해 사회적 일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2025년에는 양극화 현상을 덜고 일터와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야 한다. 지난 1월 20일 최상대안위원회가 '최대안점'을 출범시키고
사회통합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수단을 밝힌다. 노조와 경제단체, 경찰, 정부 그리고 국민
기반을 다져 대안에서 제언의 원동력으로 모두 공감하고 있어야만 지렛대 노조경제체제에서
정당한 상환하는 분리의 공이 감당당할 수 있게 된다.

사회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이다. 이것이 회복되면 사회적 신뢰가 회복되고
국민이 믿는다. 그리고 최상대안위원회가 지켜내는 공정이 사회의 주역이다. 위기를 덜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나누어 가는 것이다.

이미지 전환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보아주는 신뢰를 받기 위해
사회통합과 일터와 환경을 사회통합체 건설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기의 역량과 이익을 양보하고
사회적 대안에서 내세우기 한다. <2025 최상대안>은 우리 사회의 급진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2005 희망제안>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월 6일 169명의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협약을 제정하^자는 것^{으로}이다. ^{우려}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수출 2,500억 달러, 경상흑자 28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은 200만 명이 넘는 실업자와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 그리고 500만 명의 생계불안자가 있으며 굶어서 죽는 어린이까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 빈부, 경영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등 다원화한 갈등구조가 확산되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고용불안에서 찾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이다.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는 100만 명의 청년과 수많은 남녀 중년 전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주44시간 이상 근무하는 900만 명의 장시간 노동자와 주 56시간 이상 일하는 290만의 초과로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 치르는 과로의 대가로 연간 직장 내 산재사고가 9만5천 명, 산재사망자가 2천9백 명씩 나온다. 이로 인한 산재 손실금은 12조원이다.

^자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꾸면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대신 학습근무를 하는 것이 되어 과로체제에 따른 비용절감, 신규고용창출,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식산업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지며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2,000만 명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2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직장 내 평생학습제를 도입함으로써 10% 내외의 학습 예비조를 운영하면 최소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기존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노동자,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가 사회분열과 심각한 노사대결을 사회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남기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의 내용에는 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평생학습제 도입, 무분규선언, 기업의 투명경영과 지배구조 개선, 한국식 시장경제 모형에 대한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합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동의 종말'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적으로 11%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데 못지않게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사회적일자리란 시민사회분야의 대안적일자리로서 생산적일자리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키는 종교, 예술, 교육, 건강, 사회 및 환경운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이다. ^{우려}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리피언 드림'에서 생명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창자들은 시민사회가 학계

정부나 기업의 그림자 비정부 단체 (비영리단체) 이나 시민사회(CSO)로서 하고 있는 일은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자로 생각하고 있듯이 주당 22개 국가의 평균 '비영리' 지출은 GDP의
4.6%이며 고용 규모는 1900만 명이고 재원 규모는 1조 1000억 달러라고 한다. 이들 나라
에 적용하면 사회 복지, 환경 관리, 교육, 건강, 문화 등 150만 ~ 220만 명의 사회적 임직원 활동(문국현)
이 가능하다고 한다.

지난 1월 20일 '희망포럼'을 후원하고 사회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밝히고 있다.
노동 시장 개혁, 양극화, 교육, 의료, 주택, 공공기관 등 국가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지속적인 노력과 개혁의 여파가 있는 부분의 문제가 존재한다. 사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이다. 사회적 신뢰와 시민사회 대안들이 내세워야 한다. 위기를 딛고 희망을 키워내는 일은 혼자
도 불가능하다. 함께 내세워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장을 이익을 양보하고 쪽으로써 사회적
대안책에 내세워야 한다. <2005 희망제안>은 우리 사회의 굵은 것을 두기 위한 제안이다.

<2005 희망제안>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월 6일 169명의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협약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수출 2,500억 달러, 경상흑자 28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생계불안자가 있으며 굶어서 죽는 어린이까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다원화한 갈등구조가 확산되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고용불안에서 찾고 있다. 일자리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는 100만 명의 청년과 수많은 남녀 중년 전직자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주44시간 이상 근무하는 900만 명의 장시간 노동자와 주 56시간 이상 일하는 290만의 초과로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 치르는 과로의 대가로 연간 직장 내 산재사고자 9만5천 명, 산재사망자가 2천9백 명씩 나온다. 이로 인한 산재 손실금은 12조원이다.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꾸면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대신 학습근무를 하는 것이 되어 과로체제에 따른 비용절감, 신규고용창출,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식산업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지며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2,000만 명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2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직장 내 평생학습제를 도입함으로써 10% 내외의 학습 예비조를 운영하면 최소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기존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노동자,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가 사회분열과 심각한 노사대결을 사회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동의 종말'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적으로 11%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데 못지않게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사회적일자리란 시민사회분야의 대안적일자리로서 생산적일자리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키는 종교, 예술, 교육, 건강, 사회 및 환경운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을 의미한다.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리피언 드림'에서 생명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창자들이 시민사회를 정부나 기업의 그림자인 비정부 또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기구(CSO)이며 이를 통해 하고 있는 일은 자원봉사가 아닌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듯이 유럽 22개 국가의 평균 '비영리' 지출은 GDP의 4.6%이며 고용규모는 1,900만 명, 그리고 재정규모는 1조1,000억 달러라고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사회복지, 환경개선, 교육개혁 부문 등에서 150

10.1mm

전반적으로, 빈부, 계층과 소득분배,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등

직접상대

현

이후에
발생한 것

이러한 것의
내포가 아니라
포함시켜서

반대로

등의 활동

노년 경제

2136
만~220만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문국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20일 '희망포럼'을 출범시키고 사회협약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밝고 있다. 노조와 경제단체, 정당, 정부, 유관기관들과의 대화에서 제안의 원론에는 모두 공감하나 지금까지 노사정협의에서 경험한 불신의 골이 문제였다. 사회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신뢰이다.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위기를 딛고 희망을 키워내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함께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양보하고 깎으며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2005 희망제안>은 우리 사회의 곱은 것을 펴기 위한 제안이다.

이제

해약협약에 ←

Humal 10.5.2005

<2005 희망제안>

2005 희망제안

박 영 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월 6일 169명의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2005 희망제안>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사회협약을 제정하자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도에 수출 2,500억 달러, 경상흑자 28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생계불안자가 있으며 굶어 죽는 어린이까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 빈부, 경영자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등 다원화한 갈등구조가 확산되면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고용불안에서 찾고 있다. 일자리는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한다.

한쪽에는 일자리가 없는 100만 명의 청년과 수많은 남녀 중년 전직자들이 실직상태에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는 주44시간 이상 근무하는 900만 명의 장시간 노동자와 주 56시간 이상 일하는 290만의 초과로 근로자들이 있다. 이들이 치르는 과로의 대가로 연간 직장 내 산재사고자가 9만5천 명, 산재사망자가 2천9백 명이다. 이로 인한 산재 손실금은 12조원이다.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바꾸면 노동자들이 초과근무대신 학습근무를 하는 것이 되어 과로체제에 따른 비용절감, 신규고용창출, 노동자의 역량강화와 지식산업기반 구축의 효과가 발생한다. 사람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사람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주 40시간 일하게 되면 2,000만 명의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게 되고 200만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한 직장 내 평생학습제를 도입함으로써 10% 내외의 학습 예비조를 운영하면 최소 100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노동자의 기존 초과근무수당이 임금에서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 노동자,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협약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웨덴이나 아일랜드가 사회분열과 심각한 노사대결을 사회협약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만들어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노동의 종말'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전 세계적으로 11%의 일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한다면 일자리를 나누는 데 못지않게 사회적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사회적일자리란 시민사회분야의 대안적일자리로서 생산적일자리가 아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사회적 결속을 향상시키는 종교, 예술, 교육, 건강, 사회 및 환경운동, 지역사회참여활동 등을 의미한다.

리프킨은 그의 저서 '유러피언 드림'에서 생명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삶의 질을 중시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있다. 시민사회 주창자들이 시민사회를 정부나 기업의 그림자인 비정부 또는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시민사회기구(CSO)이며 이들의 활동은 자원봉사가 아닌 서비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걸맞게 유럽 22개 국가의 평균 '비영리' 지출은 GDP의 4.6%이며 고용규모는 1,900만 명, 그리고 재정규모는 1조1,000억 달러라고

3월 24일

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사회복지, 환경개선, 교육개혁 부문 등에서 150만~220만
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문국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
2
지난 1월 20일 '희망포럼'을 출범시키고 사회협약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수순을 밟고 있
다. 노조와 경제단체, 정당, 정부, 유관기관들과의 대화에서 제안의 원론에는 모두 공감하나
지금까지 노사정협의과정에서 경험한 불신의 골이 문제였다. 사회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상호신뢰이다. 위기를 딛고 희망을 키워내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함께해야 하는
일에 사회원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나서주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양보하고 감으며 사회적 대타협에 임해야 한다. <2005 희망제안>은 우리 사회의 굵은 것을
펴기 위한 제안이다.